

2013년 4월 26일 발행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 110-612 / 전화 02) 2271-2395 / 팩스 02) 2271-2396
후원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 (백은진) mail@workerssolidarity.org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화 돼야 한다

공채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계약 기간이 올해 8월로 만료돼, 7백여 명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는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와 연대해 '교육부가 고용안정 보장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교육부는 '행복교육' 운운하지만 단기계약직 신세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통을 마냥 방치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상당 부분을 메워 왔다. 이들 영어강사도 엄연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지만,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냉대를 받아왔다.

정규직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 명절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을 못 받았고, 방과후 수업과 방학중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극심한 고용불안 때문에 학교 관리자들의 강한 통제를 받으며 이런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 왔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각급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정규직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에서 제외되는 차별과 방학 중 영어 캠프, 방과 후 수업 진행 등에 별도의 수당도 없는 불합리함을 묵묵히 견디며 일했다는 것이다."

터무니없게도 교육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호봉제 쟁취·임단협 승리·교육공무직법안 제정·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영어교사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교육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더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다.

따라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마땅히 정규직화 돼야 한다. 전회련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즉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교육공무직화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규직화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지지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의: 조수진(간사/ 010-3629-7256)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한다

이 리플릿은 메이데이 집회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반포할 예정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 단체인 전회련과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불거졌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 위협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 대책은 회피한 채 제도 폐지만 요구했다. 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해고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 전교조 집행부의 한 간부는 <비정규노동>에 기고한 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비정규직 양산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기이하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다른 강사들보다 받는 “특혜”를 강조했다. 또, “교사자격증 미소지자가 평균 30퍼센트”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전문성’ 결여를 강조했다.

해고 불안에 떠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특권집단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말뿐이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영어교육의 제도적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되기 전에도, 전교조가 당장 해고 위협에 놓인 비정규 교사들을 방어해야 한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늘리는 데 이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파괴적 교육과정의 효과는 단지 영어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



니며, 무엇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이런 제도적 문제점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현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투쟁 지지와 대립할 이유는 없다.

방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임용고사 통과자만이 ‘전문가’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의 해고에 침묵해서도 안 된다. 교사로서 전문성은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교사양성체계를 절대시하는 관점은 협력, 전인교육, 평등 축진을 중시하는 진보교육의 논리에 어긋난다.

비정규직 교사들 중에도 정규직 교사들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이 많다.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교육을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한낱 상품으로 여기며 비정규 교원을 크게 늘려 왔다. 기간제 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인턴 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 교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교사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정규직에게도 고용과 노동조건 후퇴 압력이 증가하고 교육 노동자들 간 분열이 심화되면 국가의 보수적 교육 정책이 관철되기 더 쉬워진다.

따라서 정부·사용자들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과 비교원 등의 조건을 넘어서 — 단결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 교사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연대 대상이다. 정규직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우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충해 정규직 교원을 대거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